

미래를 준비하는 열린 知性誌 월간넥스트

NEXT

2004
02

테마특집 시리즈

한국의 갈 길을 묻는다 ②



한국 외교, 동맹이냐 자주냐

‘이라크 파병 이후’의 한미동맹
‘이라크파병 이후’의 한미동맹 - 또 하나의 견해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독주 사이에서 한국의 대응은?
한반도 평화-통일은 어떻게?

한국 보수의 자가 비판

유석춘 | 나성린 | 복거일

세계의 눈



칸쿤의 실패, 그 속의 성공
미국의 전략, ‘파트너십’
“自衛隊파병은 일본의 責務다”
“일본 위한 주일미군은 없다”

김다은의 말뚝치 **짱의 나라**

(주)월간NEXT

한국 보수의
자가비판

누구를 위한 성장, 안보, 경쟁인가 스스로 정당성 제시해야

유석준 _ 연세대 교수 / 사회학

‘진보’로부터 주어진 상표 ‘보수’

돌이켜 보면 한국의 ‘보수’는 스스로를 먼저 ‘보수’라 부른 적이 없다. 오히려 그들은 스스로를 ‘진보’라 부르는 집단으로부터 상대화되어 ‘보수’라는 상표를 부여받았다. 따라서 한국의 보수는 스스로 정체성을 찾는 능동적인 모습을 전혀 보여 주지 못했다. 오히려 이들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내세운 진보로부터의 도전을 맞이하면서 비로소 존재를 확인하게 된 수동적인 집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보수는 무엇이며 또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들 보수를 공격하고 비판해 온 진보는 과연 무엇이며 누구인지를 명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진보라는 단어 혹은 개념을 시사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와 매체는 아마도 80년대의 대학 언론이 효시가 아닌가 싶다. 지금은 그와 같은 기능이 퇴색했지만 80년대 초 대학의 언론은 당시 비합법적으로 지하에서 활동하던 우리 사회의 소위 ‘운동권’이 자신의 입장을 비교적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었던 유일한 합법적 공간이었다.

당시 운동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학생운동의 지도부는 때론 실명으로 그리고 때론 가명으로 자신들의 운동노선 즉 ‘마르크스주의’(PD)나 ‘주체사상’(NL)과 같은 좌파의 전위적 ‘혁명이론’을 대학 언론에 ‘진보’라는 단어를 써가며 확산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들은 ‘혁명’이라는 개념이 불가피하게 수반하는 과격성 혹은 파괴성으로 인해 일반 학생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정서가 운동으로부터 멀어지는 현상을 경계하며 ‘변혁’ 혹은 ‘민주화’와 같은 보다 온건한 개념을 동시에 사용하는 이중적인 전략을 구사했다.

즉 당시 좌파 운동권의 혁명노선은 이중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었다. 이들은 한편으로 이념적이고 이상적인 차원에서는 '급진' 적인 혁명을 꿈꾸었지만, 다른 한편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분계에서는 보다 '온건' 한 민주화를 요구하였다. '진보' 라는 용어에 내포된 이와 같은 의미의 이중성은 한국 현대사의 굴곡과 함께 나타난 좌파 운동권의 '성공' 과 '실패' 때문에 극단적인 평가를 오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진보' 의 개념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선 86년을 분기점으로 한국사회는 운동권의 현실적 주장인 민주화에 국민적인 동의를 했다. 그러나 당시 물밑에서는 민주화 이후의 한국사회에 어떻게 하면 무산계급 중심의 혁명을 앞당길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운동권의 현안이 되고 있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 그로부터 3년 후인 89년을 분기점으로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하면서 운동권은 진지구적인 이념의 좌절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이후 한국 아니 세계 어디에서도 사회주의 혁명을 공개적으로 추구하는

지금부터 다시 성장과 안보 그리고 경쟁이라는 우파적 가치를 통해 미래의 발전을 위한 축적을 준비하여야 한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수의 반성과 이를 통한 정체성의 확립이 전제되어야 한다. 보수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갈등과 반목의 상처를 보듬고 사회통합의 지도력이 다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운동 노선은 사실상 힘을 잃었다.

결국 3년의 시차를 두고 한국의 운동권은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성공과 좌절을 연이어 겪은 셈이다. 민주화에 대한 성공 그리고 혁명에 대한 실패의 경험은 이들로 하여금 '혁명' 이라는 과격하고 불가능한 목표를 포기하고 대신 '개혁' 과 같이 보다 온건하고 실현가능한 목표를 추구하도록 종용하였다. 민주화 이후 진보의 이름 하에 '혁명' 대신 '개혁' 이 운동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 까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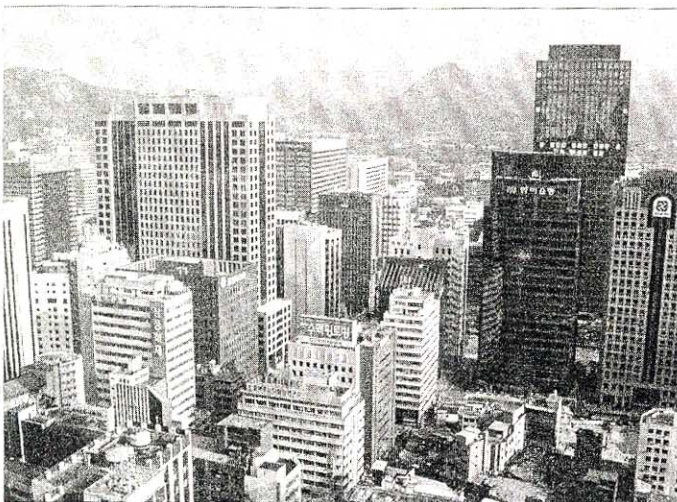
바로 이 시점이 한국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운동을 주도하던 '학생운동' 이 힘을 잃고, 대신 새롭게 운동을 주도하는 방법으로 '시민운동' 이 각광을 받게 된 시점과 일치하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물론 시민운동의 대안은 더 이상 동구나 중국 혹은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 모델이 아니었다. 이들은 보다 온건한 서구의 '사회 민주주의' 모델을 수용했다.

종합적으로 보아 '진보' 는 좌파 운동권이 이중적인 전략을 구사하며 현실의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대중성 확보를 위해 사용했던 개념이다. 이들은 초기 과격한 혁명을 추구하는 노선을 따르기도 했지만, 상황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후기에는 서구의 사회 민주주의 노선을 가능

한 대안으로 채택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진보는 성장보다는 분배, 안보보다는 인권, 경쟁보다는 평등을 선호하는 좌파적 정체성을 핵심으로 한다.

누구이고 무엇을 했는가

그렇다면 이러한 진보의 공격을 받는 보수는 누구이고 무엇을 하였는가. 진보가 공격하고 있는 보수는 다름 아닌 해방과 전쟁 그리고 분단이라는 혼란 속에서 오로지 잘 살아 보겠다는 일념으로 국가건설과 산업화에 매진한 집단이고 노선이다. 냉전의 유산이 지배하는 남한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장애를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대신 이들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는 선택을 했다. 가난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이들은 월남의 정글도 또 중동의 사막도 그 어느 곳도 마다하지 않았다.



신도시

한국의 보수집단은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원동력이었지만 스스로의 정당성과 정체성 확립이란 숙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들의 노력은 '대성공'이라는 평가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전쟁 직후 세계 최빈국의 하나이던 국가를 이들은 한 세대만에 일인당 국민소득이 만 불이 되는 국가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다.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이들은 '한국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불철주야 일을 했다. 그 결과 서구 국가들이 한 세기에 걸쳐 이룩한 성장을 이들은 한 세대만에 압축해 이룰 수 있었다.

50년대와 60년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던 남미가 70년대와 80년대에 빛더미에 오르는 사이 이들은 한국이 구미의 선진국을 바짝 뒤

쫓을 수 있도록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 냈다. 그 결과 우리는 2차 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국 가운데 가장 성공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왜냐하면 산업화의 후발국이 구미 시장을 상대로 자동차와 가전제품을 팔고 선박과 철강을 수출해 성공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아시아의 다음 거인'이라는 평가가 이를 웅변으로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누가 이러한 성공을 만들어 내었는가. 두 말할 것도 없이 산업화를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또 실행한 관료 집단이다. 다음에는 이러한 관료의 산업화 정책에 호응해 경제를 일으킨 기업인들이다. 한편 이러한 산업화 드라이브가 가능하도록 질서를 유지하고 안보를 책임져 왔던 군과 경찰의 기여 또

한 무시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산업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개인적인 수준에서 참여를 마다하지 않은 각계각층의 국민들 역시 넓은 의미의 보수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보수는 인권이나 분배 그리고 평등과 같은 가치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이들 보수에게 그러한 가치들은 일종의 사치품일 뿐이었다. 전쟁 직후의 엄혹한 상황에서 이들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생존 그 자체였다. 그리고 그 생존은 성장과 안보 그리고 경쟁과 같은 우파적 가치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들은 심지어 권위적인 통치마저도 수용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 현실을 헤쳐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 이들에게는 관념적인 민주주의의 이상보다는 생존이 걸린 현실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보의 공격을 받는 우리 사회의 보수는 바로 이러한 생존의 문제를 단기간에 그리고 매우 효율적으로 해결한 집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스스로의 성취를 기반으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 좋게 말해 겸손하고 나쁘게 말해 바보 같은 집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장과 안보 그리고 경쟁을 생존의 가치로 체화한 보수의 우파적 역할이 없었다면, 진보의 가치인 분배와 인권 그리고 평등과 같은 좌파적 가치는 한낱 허울 좋은 사상누각일 수밖에 없다.

왜 비판의 대상인가

진보의 시각에서조차 보수가 이룩한 국가건설과 산업화 그리고 경제성장 자체를 무조건 비판하기는 어렵다. 성장 없는 분배는 단지 하향 평준화일 뿐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진보라고 여기는 사람들조차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수는 스스로의 역할과 위상을 적극적으로 정립하고 나아가서 홍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보수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정치적 정당성의 확보에 실패했다는 사실이다. 국가건설과 산업화를 담당한 구체적인 정치집단인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은 모두 철저적 민주주의의 기본을 따르지 않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한 사람은 부정선거 그리고 다른 사람은 군부 쿠데타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권력은 경찰력이나 군사력과 같은 물리적 힘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른 한편 보수는 스스로 주도한 성장에 취해 산업화의 그늘에서 소외되고 있던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를 소홀히 하였다. 겉으로는 파이를 키우기 위해 모든 국민이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

이야 한다고 선전했지만, 속으로는 대부분 성장의 열매를 혼자 챙기려 한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기업은 망해도 기업인은 망하지 않는' 역설이 통념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한국의 보수에게는 이른바 '귀족의 의무' 를 찾아볼 수 없다는 비판이 힘을 얻게 되었다.

또한 보수는 냉전과 남북대결이 강요한 안보의 중요성에 안주하며 인권의 사각지대를 양산했다. 우파적 노선은 좌파적 비판이 동반될 때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기본적인 균형감을 상실하고 사회불안을 핑계로 민주화에 대한 요구를 탄압했다. 북과의 대결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많은 국민들이 스스로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연좌제의 고통을 안고 살도록 강요한 사실이 대표적인 예다. 그래서 보수를 비판하면 그 자체로 범죄를 구성하게 되는 획일적인 사회로 치닫게 되었다.

좌파적 노선을 배경으로 한 진보가 한국에서 대중적 인기로 호소할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다. 누구를 위한 성장이고, 누구를 위한 안보이며, 누구를 위한 경쟁인가를 묻는 진보의 질문에 보수는 스스로의 정당성을 제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임기응변만으로 결코 보수는 진보에 대한 도덕적 권위를 확보할 수 없다. 보수는 자신의 노선이 개인적 영달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철학이고 정책이라는 신념을 국민 모두에게 확신시킬 수 있어야 했다.

새가 죄의 날개로 날 듯이 보수와 진보 혹은 좌와 우는 서로가 함께 존재할 때에 가치가 있다. 우리는 누군가가 부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난하게 되었다고 믿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누군가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았다는 확신이 필요하다. 진보의 비판에 보수가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을 때 우리 사회는 건강해진다.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보수의 정체성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까닭이다.

비록 한국의 보수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진보의 비판에 대응하며 찾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국가건설과 산업화에 기여한 보수의 몫 자체를 진보에게 빼앗길 수는 없다. 이들이 이룩한 최근 한 세대의 도약을 발판으로 비로소 진보의 비판이 의미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진보의 상대 개념으로 정체성을 찾기 시작한 보수는 오히려 진보를 보수의 상대 개념으로 위치시킬 수 있는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한국 현대사의 객관적인 상황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보수의 역할 어느 때보다 막중

진보가 득세한 민주화 이후의 상황을 돌이켜 보면 역설적이게도 우리 사회에서 보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필요한지를 잘 알 수 있다. 군사정권에 대한 도덕적 우위를 강조한 김영

삼 정부와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내세운 김대중 정부는 모두 진보의 가치 즉 평등과 인권 그리고 분배와 같은 좌파적 가치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그러한 좌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물질 토대의 구축에 이들은 전혀 기여한 바가 없다.

오히려 이들 진보는 모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진 우파의 성취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가치를 추구하며 생색을 낼 수 있었을 뿐이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들 진보는 보수가 피땀으로 만들어 놓은 지난 한 세대의 결실을 한 순간에 모두 까먹기도 했다. 97년의 경제위기는 생색 내기에만 관심을 쏟고 새로운 국제환경의 대두에는 무관심하던 김영삼 정부가 자초한 재앙이었다. 경제를 관리하며 파이를 키우던 국가의 능력은 진보가 집권한 후 완전히 실종되고 그 자리에는 사회 각 집단의 제몫 찾기가 들어섰을 뿐이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스스로 자신의 업적이라고 내세우는 '햇볕정책'은 보수의 유산이 없었으면 꿈도 꾸지 못했을 정책이다. 햇볕은 북한의 주민을 도와 한반도에 평화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주장이 사실 따지고 보면 과거 보수 정권이 축적해 놓은 산업화의 열매를 진보가 활용해 생색을 내보자는 정책일 뿐이다. 몰래 송금한 뒷돈이야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마찬가지로 97년의 위기를 타개하는 데 요긴히 쓰였다는 '공적자금' 역시 과거 보수 노선의 세레가 없었다면 조성이 불가능한 돈이었다.

노무현 정부의 등장은 보수의 시각에서 이러한 우려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보다 나은 미래의 설계를 위한 청사진은 없고 그 자리엔 허구한 날 네 탓이라는 싸움만 벌어지고 있다. 또한 우리가 앞으로 무얼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없고, 대신 지금 있는 걸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만 초미의 관심의 집중되고 있다. 사회는 통합되는 방향으로 나가기는커녕 분열되고 있으며, 경제는 미래를 위한 투자는커녕 당장 해결해야 할 청년실업으로 멍들고 있다.

보수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진보의 시대가 헤집어 놓은 갈등과 반목의 상처를 보듬고 국민 모두가 희망과 용기를 갖고 미래를 향해 어깨를 나란히 하며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사회통합의 지도력이 다른 어느 때보다 절실하기 때문이다. 분배와 인권 그리고 평등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결국 하향 평준화된 도토리 키 재기 식의 싸움판을 만들 뿐이라는 사실을 이젠 깨닫고도 남을 때가 되었다.

지금부터 다시 성장과 안보 그리고 경쟁이라는 우파적 가치를 통해 미래의 발전을 위한 축적을 준비하여야 한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수의 반성과 이를 통한 정체성의 확립이 전제되어야 한다. 좌파적 가치는 우파적 가치를 전제로 할 때만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국민을 상대로 설득하여야 한다. 보수여, 각성하고 단결하고 행동하라. **NEXT**